

사회

# 중학생 휴대폰 금지냐 허용이나

### 贊 “김길태 사건으로 불안...등·하교 땀 사용을” 反 “면학 분위기 해쳐...학생 간 위화감 조성도” 광주, 소지금지 25곳·학교 내 사용금지 56개교

중학생들의 학내 휴대전화 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신학기마다 불거지는 문제지만 올해는 유독 '김길태 사건'으로 인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길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폭행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교 때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소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학교는 면학분위기 저해 등을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 중학교 등에 따르면 2009년 12월말 현

재 광주지역 전체 84개 중학교 가운데 학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곳은 모두 25개교(30%)에 이른다.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지만 학교 내 사용을 금지하는 곳은 56개교이며, 교내 사용을 허용한 학교는 3개교다.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A중학교는 학생이 학교로 휴대전화를 가져올 경우 압수와 함께 벌점을 준다. B중학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의 휴대전화 교내 반입을 금지한다는 가정 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 학교 측은 교내 휴대전화 소지에 따른 폐해로 ▲통화·문자·게임 등에 따른 면학 분위기 저해 ▲값비싼 최

신형 휴대전화로 인한 학생간 위화감 조성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등·하교 때는 물론 방과 후 자녀의 행적을 알 수 없어 걱정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딸을 둔 학부모 정모(여·42)씨는 “딸이 등교한 후 귀가할 때까지 연락이 안 돼 불안하다. 특히 요즘처럼 언론에 성폭행 사건 보도가 잦을 때면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면서 “초등학교 때도 가지고 다녔던 휴대전화를 무작정 못 가져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김모(여·48)씨도 “아이가 오전 8시에 등교했다가 학원 등을 다녀온 뒤 귀가하면 보통 오후 8시가 넘는다”면서 “아이가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를 밖에서 보내지만, 연락을 할 수 없어 답답하

다”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교내 사용을 금지하는 등 탄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56개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휴대전화를 회수한 뒤, 학교 때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교내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제를 통한 봉사활동, 부모 통보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장은 “휴대전화를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도구로만 바선 안 된다”면서 “부모·자녀, 학교·학생을 연결해주는 것은 물론 학생지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만큼 사용은 금지하되 소지는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여고생 접대부 고용 돈뜯은 조폭 들 구속

여고생 6명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소개해 준 뒤 소개비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속칭 '보도방' 업주 등 조직폭력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5일 광주 무등산과 행동대원 양모(21)씨와 임모(21)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듬해 3월 12일까지 4개월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한 모텔에 숙소를 차려놓고 이모(17·

광주 모 고교 2년)양 등 6명의 여고생을 고용한 뒤, 유흥주점 20곳에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양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 당 1만원씩 받는 등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한 유흥주점 주인과 모텔 주인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양씨 등이 여고생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지문인식 시스템·디지털 도어록·CCTV...

### 전남대 첨단 방법 기숙사 뚫렸다

#### 여학생 방 침입 현금 훔쳐

현관 출입문에는 지문인식 시스템, 각 방에는 디지털 도어록, 기숙사 건물 내·외부에는 방범용 CCTV... 최첨단 중앙통제식 경비 시스템을 갖춘 전남대 기숙사(예향학사 여자동)가 좁도둑에 뚫렸다.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5시께 복구 용광동 전남대 예향학사 여자동 4층에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김모(여·20)씨의 방에 들어와 서랍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쳐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범인은 발코니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 창문이 열린 4층으로 몰래 들어간 뒤 내부 계단을 이용, 현관 출입문으로 걸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동종전과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이 기숙사는 지난해 7월 11일 에도 여자동 8층에 흥기를 둔 강도가 침입, 복도에서 여학생을 흥기로 위협한 뒤 달아났다가 범행 범행 25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호남 조폭 50억대 도박판

호남 최대 폭력조직이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역대 수수료를 뜯는가 하면 급전을 빌려주고 520%의 고리를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판돈 50억 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한 국제PJ와 서울지방장 송모(39)씨 등 3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등업원 서모(여·38)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 어머니 동거남 선택에 불 질러

○...여수해경청은 15일 어머니와 동거하다 헤어진 남성 소유의 여선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양모(35)씨를 현주선박 방화 혐의로 구속.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6시께 여수시 화양면의 한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이모(63)씨의 3.3급 여선에 침입, 갑판 위에 불을 질러 6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 ○...해경 조사 결과 양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수년간 동거하다 지난해 4월께 헤어진 이씨와 위자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함정에 불을 질렀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탈세 기업인에 돈 받은 세무공무원 입건

순천경찰은 15일 탈세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박모(39·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월께 순천시 조례동 한 주점에서 모 유흥회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향응집대를 포함한 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대리운전 기사들 삭발 시위

광주지역 대리운전자 300여명이 15일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삼무지구 한 웨딩홀에서 '광주지역 대리운전 평가사협의회' 출범식을 가진 뒤, 협의회 간부들이 대리운전 수수료 인하 등 4개항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성폭행 후 입막아 살해”

#### 김길태 범행 일체 자백...오늘 현장검증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5일 피의자 김길태(33)가 이모(13)양에 대한 납치, 성폭행, 살해, 시신유기 혐의 등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부산사상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길태가 ‘이양이 성폭행 당시 소리를 질렀고, 그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아 살해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며 “이양 시신의 부검결과를 전해 들은 김이 ‘박모 수사관을 불러 달라’고 요청한 뒤 자백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9선’ 목포농협 조합장 자격 상실 논란

#### “농지 소유·농업 경영 없다”

‘전남 최다선’인 9선의 오정숙(75) 목포농협 조합장이 수년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치러진 목포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선주씨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오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당선 취소와 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시정 청구서에서 “오씨는 지난 1973년 2월 23일 목포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1991년 본인 소유의 농지가 옛 주택공사에 수용된 이후부터는 농지 소유나 농업 경영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조합장은 “김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목포시 상동 등지에 1천㎡가 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김씨를 상대로 법적 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지방경찰청은 오 조합장이 제출한 영농 내역서 등을 토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se@